

기술표준원, 정부주도 업무 대폭 민간이양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그동안 정부주도로 추진해 오던 국가표준 개발 및 신제품 인증업무의 단계적 민간이양과 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법의 행정안전부 이관 추진을 계기로, 글로벌 환경이 요구하는 기술서비스 지원, 민간주도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표준정책 추진, 민간자율형 안전관리로 시장감시 중심의 제품안전 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플랜(KATS 2012)을 마련하였음

* KATS : 기술표준원(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특히, 헌법정신에 의해 '99년 만들어진 국가표준기본법이 지식경제부에서 표준정책을 주관하는 기술표준원으로 이관되면서 기술표준원장이 '국가표준심의회' 간사를 담당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표준 대표기관으로 도약하게 되었음

* 헌법 제127조2항 :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중장기 플랜인 KATS 2012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 해외 기술규제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BT 중앙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술규제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접수, 기업애로 현장점검, 해외 기술규제 정보 분석 및 기업제공* 업무를 새로이 추진하는 등 기술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함

* 기술규제 종합정보(KnowTBT) 포털(www.knowtbt.kr/alert) 개설 '08.9

- 아울러, 민간주도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구(COSD*)를 육성하고, 「R&D - 특허 - 표준화」 연계, 고유가·고물가 등 사회적 이슈나 국정과제 관련하여 표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세계 12위권인 국제표준화 실적도 7위권으로 올리도록 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 COSD :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경우는 규제중심의 정부 안전인증제도를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기적합성선언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감시와 같은 사후관리만 수행하는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선진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TBT협상 등 반드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기존의 표준 및 안전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 업무는 과감히 민간이나 타부처로 이양할 계획임

- 민간의 표준화 기반 부족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국가표준(KS) 개발은 COSD를 육성하여 '09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서 추진

- NEP(신제품)·GR(재활용)·LS(물류설비) 등 인증업

무는 민간기관에 이양하고 인정제도의 관리 등 관련 제도만을 담당

- 국가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로 올해 중 이관 추진

- 기술표준원은 7.18일부터 19일까지 지식경제부 연수원(천안 소재)에서 표준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KATS 2012 플랜의 유기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KATS 2012」 플랜 개요

1 기술표준원의 진화과정

근대 개화기 (1883~1945)	공업화 초기 (46~'72)	경제성장기 (73~'96)	글로벌경쟁기 (97~'08)
화폐 주조·분석 등 근대공업화의 시초	공업기술 연구로 경공업의 산업화를 견인	시험·분석의 메카로 산업발전을 지원	국제기준의 표준화, 안전관리, 인증 등 기술인프라 제공
도량형법(1905)	공업표준화법('61) 계량에관한법률('61) 공산품품질관리법('67)	전기용품안전관리법('74) 승강기제조및관리법('92)	국가표준기본법('99) 어린이놀이시설법('08)

2 기술표준원에 대한 인식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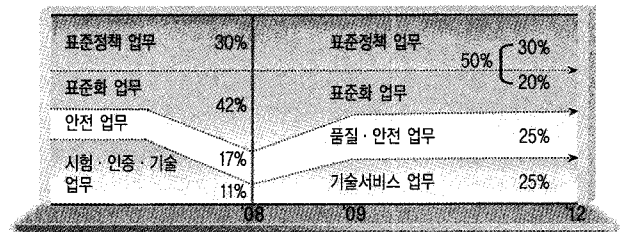
- 긍정적 측면 ⇨ 국가표준 확립(23천종), 국제표준화 활동(세계 12위), FTA/TBT 협상, 제품안전관리 등을 통해 산업발전 및 소비자보호에 기여

- 부정적 측면 ⇨ 환경변화에 부응한 표준, 안전정책의 신속한 대응 및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지원 역할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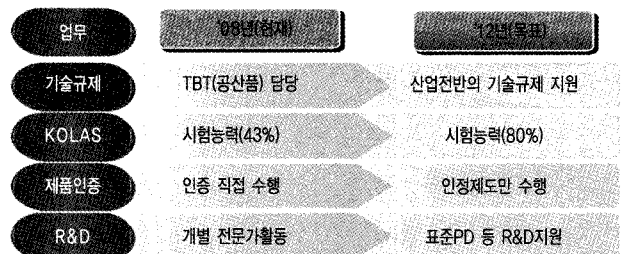
3 기술·표준·안전에 대한 기대수요의 변화

- 기업 ⇨ 각종 강화된 국제기술규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기술의 표준선점을 통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싶다.
- 국민 ⇨ 불량제품의 안전사고 등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 정부 ⇨ 각부처는 소관분야의 표준화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고 싶다.
WTO, FTA 등은 기술표준 협정 이행을 위해 국가차원의 단일창구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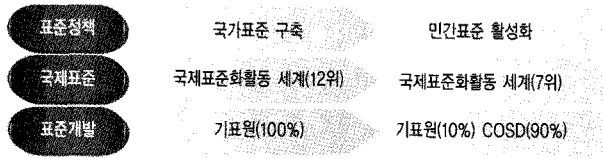
4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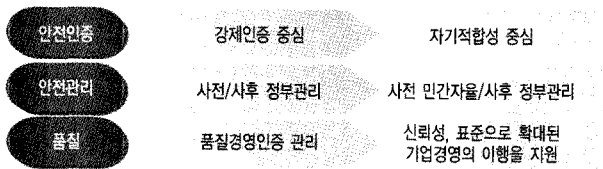
- 새로운 기술업무 발굴로 기술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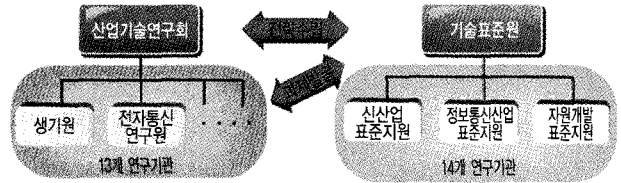
■ 표준개발은 민간이양하고 표준정책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와 기업지원 품질정책을 추구



■ 지경부 산하 연구기관의 협력강화를 위한 facilitator 수행
 • 기표원 직원을 연구회에 파견하여 기술전략 및 협업과제 등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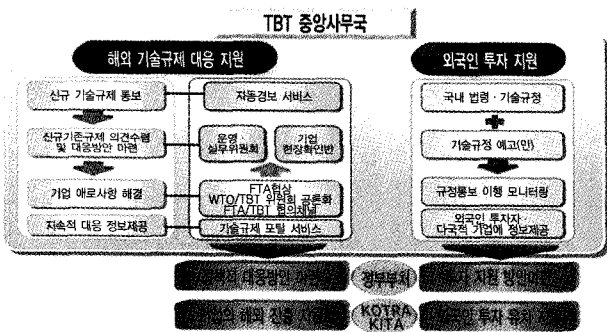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품질정책 수립·지원
 • 국가품질상 심사를 위한 기업진단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품질정책을 전환

5 주요 추진과제

가. 기술중심으로 추진할 새로운 과제

- 국내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 공산품, 농수산물, 의약품 분야를 총괄하는 TBT 중앙사무국 무국 개소('08.9)
 - 해외 기술규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10개 분야 실무위원회 및 기업애로 해소 현장지원반 운영
 - * 국내 L전자는 호주 기술규정에 의한 에너지등급 오기로 22억원 손실('06년)
 - 국내 기술규제의 WTO 통보 이행 및 정보제공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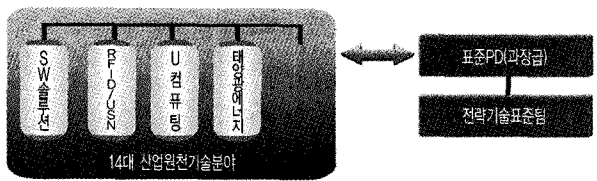


나. 표준 및 안전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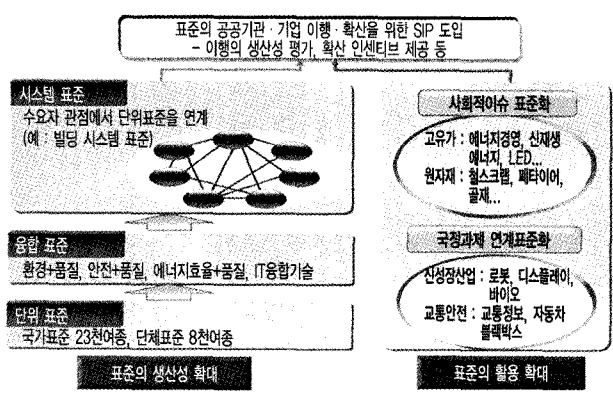
- 표준정책 기능의 강화
 - 「R&D-특허-표준화」연계로 기술혁신의 선순환구조를 구축
 - 「R&D-표준화」연계를 위해 부처별 R&D 관련 12개 운영규정 개정
 - 특허청 및 변리사회와 공동으로 '특허표준' 확보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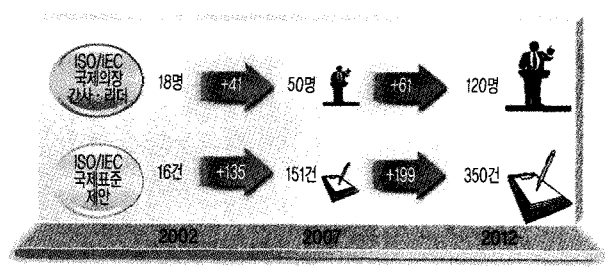
- 지경부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는 표준PD(Project Director) 및 지원과 신설



- 에너지·원자재 등 사회적 이슈 및 국정과제 관련 표준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의 표준기술 이행(Standard Implementation for Productivity)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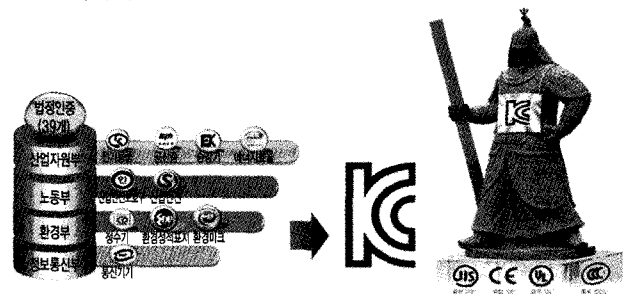
- ISO/IEC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세계 7위권 달성



- 표준을 통한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표준과 산업의 연관성도별로 차별화된 산업특성별 표준화전략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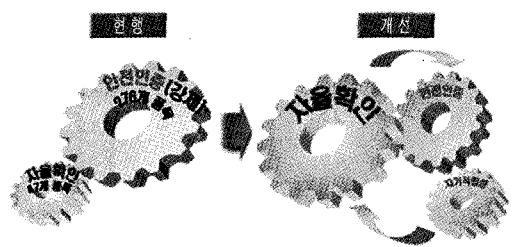
	정보통신산업군	미래성장산업군	주력산업군
표준화 연계정도	표준이 산업을 주도	표준과 산업이 동반	표준은 산업을 지원
표준화 전략	표준 선점	표준 개발	표준 활용·확산
표준사례	RFID 표준	지능형 자동차 표준	조선기자재 표준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술 포럼 지원(40개) 10대 표준화 전략분야 IT-R&D 일체화 연계 IT 표준전문가 양성(300명) HW(지정부)-서비스(빙동위) 전략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대 산업원천 R&D와 표준화 연계 안전평가 표준 개발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12년까지 30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의 표준활용지원 산업발 단계표준 활성화 수요자 관점의 시스템 표준 개발 보급

- 통합마크 도입 등 범부처 인증제도의 친기업적 개선을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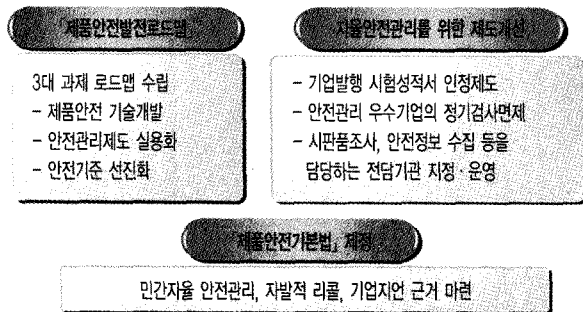
■ 안전관리의 선진화

- 자율안전확인 확대 및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을 추진
 - (단기) 자율안전확인을 확대하여 시장효율성 중심의 안전관리
 - (중장기)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하는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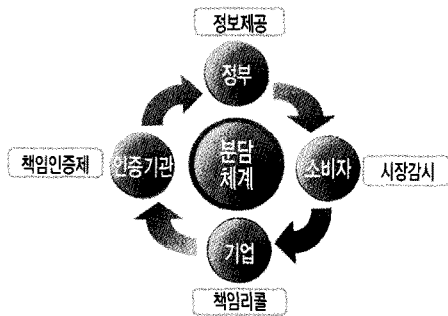


인증구분	인증심사	제품시험	인증서
안전인증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자율확인	-	인증기관	인증기관
자기선언	-	기업자율	기업자율

- 종합적인 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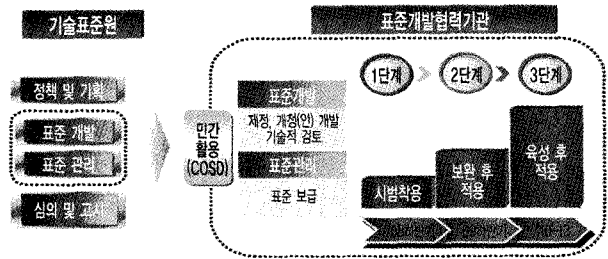
- 안전관리 주체별 분담체계 구축으로 책임안전 환경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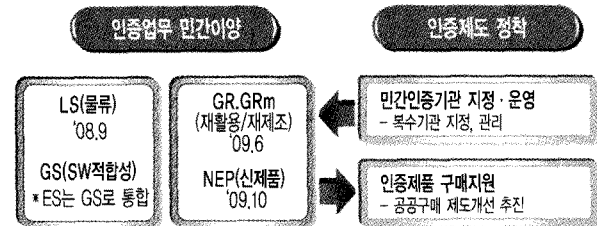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구매주의보 발령 • 위해정보 신속조치, 안전망 운용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리콜 • 위해발생 시 자진신고
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 원인 분석·조치 등 책임관리 • 불량이 높은 제품유통시 해당 인증기관의 지정목록에서 제외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감시 참여 • 안전한 제품 사용하기 캠페인

다. 민간에 업무를 이양할 과제

- 국가표준 개발업무를 '09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이양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육성, 민간표준화 활성으로 이양기반을 조성



- NEP(신제품) 등 인증업무는 민간이양하고 인증제도만 수행
 - S/W인증(ES, GS)은 GS로 통합하여 민간이양하고 GS 인증제도 운영



-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업무는 행안부로 이관

